

## KS규격 전면 규정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국가표준규격(KS)이 국제규격(IEC)으로 전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전자분야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체계(IEC·ISO)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우선 가전·조명·전선·배선기구 등 산업현장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164개 품목에 해당하는 KS 규격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선진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을 무역상의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KS규격에 대한 국제규격을 도입, 기술장벽 해소와 함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충키로 하고 이같은 국가표준 개정작업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사업을 그동안 KS규격이 일

본의 JIS규격과 관련 제·개정되던 대응방식 개념에서 탈피하여 ISO 및 IEC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 통상마찰등에 따른 국제 호환성, 환경성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의 시행시 개별 품목을 고려, 추진하게 될 KS규격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말까지 전기용품 40개 규격을 개정하고, 나머지 전기·전자제품 규격도 내년 12월까지 국제규격 수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KS 개정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완전면제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KS를 취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IEC 국제표준을 조기 채용키로 했다.

## 핵심기술 개발사업 125과제 선정

산업자원부는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과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125개를 '2001년도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로 확정, 앞으로 3년간 505억원(정부출연 290억원, 민간부담 21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번 지원 과제는 지난 3월말까지 응모한 464개 과제 가운데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기계금속이 38건, 섬유화학 35건,

정보통신 28건, 전기전자 24건 등이다.

산자부는 이들 신규과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기술개발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차 연도 사업비 249억원(정부 144억원, 민간 10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화에 성공하면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40%, 중소기업은 20%를 각각 기술료로 징수할 예정이다.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산업현장의 핵심기술 과

제를 발굴해 1~3년내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4,039개 과제에 7,323억원을 지원해 2,712개 과제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 수요조사와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신규 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들 “수출기업 지원 총력”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력 수출을 다짐하고 나섰다. 전국 15개 시·도 수출담당국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들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중앙·지방 연석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수출지원 방안들을 논의했다.

장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울산(14.9%), 경남(14.2%), 광주(6.4%) 등은 수출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수출비중이 81%를 차지하는 지방수출(서울 제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시도 수출담당 국장들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수출 증대로 되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확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우선 부산 7회, 경기 6회를 비롯 하반기 해외전시회 참가에 49회 지원하는 한편 시장개척단 파견 29회, 한국상품 구매상담회를 29회 갖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하반기 중 유럽에서 74개사가 참여하는 ‘부품산업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113개사, 서울 42개사, 경북 20개사 등 총 263개사가 선정된 올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위해 해외마케팅, 디자인개발 등의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서울 20개사, 경기 22개사, 인천 10개사 등 총 62개사에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보험료(수출금액의 0.3% 수준)의 일부도 지자체 자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 수출보험료 지원예산은 경기 2억원을 비롯 전국 5억4,0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해외무역사무소를 운영해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거점 도시는 △북경 LA(서울) △마이애미 오사카 상해(부산) △대런 동경 오사카(충북) △뉴욕 구마모토 상해(충남) △부다페스트(경북) △시모노세키 산둥(경남) 등이다.

종합상사와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은 삼성물산과 협력해 거래처 수요조사, 전략품목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남은 7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종합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시도 수출담당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공항로 직항로 개설(대구, 광주) △일본 식물검역 강화 통상 대응(전남) △수보공, 수은 지사 설치(울산, 광주) 등을 산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산자부도 지역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각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수출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중소기업 수출간담회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애로를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하반기 해외마케팅 지원활동계획(횟수, 개별지원은 업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전 시 회	4	7	3	3	2	1	1	6	3	4	4	1		1	9	49
개별지원			(9)	(12)	(10)				(7)	(20)		(10)	(13)			(81)
시 개 단	2	3	3		1	1	1	4	1	1		1	3	3	5	29
상 담 회	2	2	1	2				15	1	1		1	2	1	1	29

## 대형건물 신축시 사용 의무화 고효율기자재 수요 크게 늘어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에 힘입어 고효율 조명기구나 저손실형 변압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9년부터 50세대이상 공공주택이나 일정 규모를 갖춘 대형 건축물의 신축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건물유형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랐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통합, 고효율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풍토를 조성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토록 한 것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수요를 늘리는데 특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최근들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서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내 건축조례를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경기도는 이미 시·군 에너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마친 상태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축물의 허가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률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2W형광램프 보급량은 총 652만4천개로 '99년 363만1천개보다 무려 2배이상 증가했다. 총보급량중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 달했다.

형광램프용안정기도 보급량이 크게 늘어 총보급량의 26.6%인 301만6천개가 보급됐다. '99년 점유율은 9.1%에 불과했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의 경우 지난해 81만8천개가 보급, 점유율이 무려 68.2%에 달했다.

이와함께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도 '99년 9천987대에서 지난해 점유율이 무려 68.2%에 달했다.

이와함께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도 '99년 9천987대에서 지난해 1만561대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무정전전원장치도 지난해 처음으로 191대가 보급됐다.

## 중전기 하반기 수출 호조 기대

중전기기업체의 해외수출이 하반기부터 호조를 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정책심의관 주재로 열린 '18개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팀'의 1차 보고회에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하반기 이후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수출업체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미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둔화가 최근 수출부진의 최대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중동, 중남미 및 유럽 등으로 수출판로를 다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반도체 등 대부분의 품목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선부문은 상반기 수

출액이 많아 하반기 수출액은 상반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전기부문은 국내 기술력이 상승해 품질과 가격경쟁력 등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수출다변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하반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섬유부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와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수출업체들은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산자부에 ▲환율안정 노력 강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수출보험업무처리 간소화 ▲통신분야로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상대국 수입규제조치에의 대처 ▲부산항컨테이너세징수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 부품소재 10년간 2조 지원 확정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2조원이 지원된다. 또 매년 50개 '수출리딩컴퍼니'를 선정,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10년간 선진국 부품소재기업 200개를 국내에 유치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산업연구원, 전경련, 기협중앙회 및 부품소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품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는 등 세계 교역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격 품질 공급여건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부품소재산업을 21세기 주력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부품소재분야를 오는 2010년 무역흑자 500억달러를 달성하는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3대 발전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3대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매칭펀드 방식으로 10년간 2조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매년 글로벌소싱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핵심부품소재기술 50개 이상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품소재 수출비중을 현재 43%에서 오는 201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 1등 부품소재 전문 벤처기업 50개와 중견기업 100개 등 총 150개 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이 같은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세부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부품소재기업의 '공용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분사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부품 표준화가 마련된다. 또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이 통합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지원센터'를 구성, 관련 인력과 장비를 맞춤형으로 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업의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도 강화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업종

별 단체 등을 통해 해외 전문 바이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또 '한국부품소재종합전시회'가 연례행사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매년 50개 수출리딩컴퍼니를 인증,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독일 등 선진부품소재 200개 기업을 외국인전용공단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된 부품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성 향상'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계연구원 등 7개 신뢰성센터를 활용, 신뢰성평가와 인증을 산업체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기계공제조합과 민간 보험사를 통한 신뢰성공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매년 50개 이상의 핵심부품 소재에 신뢰성인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개구매 입찰 시스템 등 정보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구매업계와의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가 지원된다.

부품소재 3대 발전목표
1. 2010년까지 세계 1등 전문기업 150개 창출
2. 매년 50개 이상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3. 우수 부품소재기업들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계 편입

부품소재 발전 5대 핵심과제
1.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2. 부품소재산업 종합기술력 향상
3. 개발된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4. 부품소재의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5. 부품소재의 체계적 정보화

## 인터넷데이터센터에 UPS설치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센터안에 최소 20분 이상 평균전력의 130%를 공급할 수 있는 무

정전 전원장치(U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 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5개 항목의 'IDC 보호지침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IDC는 또 24시간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 온 항습기와 출입통제장치, 경보장치, 정전에 대비 한 자가발전설비 등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통부는 업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7월 과 8월에 실사를 거쳐 사전 심사를 진행한 후 9월 에 전담반을 설치, 10월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나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IDC를 기초와 상위, 최상등급 등 3단계로 나누고 '자체 발전시간 12시간, 40분이상

UPS 가동' 등을 만족시켜야만 최상등급을 부여키 로 했다.

IDC 시설에 대한 안전 신뢰성 점검은 1일 새롭 게 출범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옛 한국정보보호센 터)가 맡게 된다.

정통부측은 "IDC 보호지침이 시행되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IDC에 대해 일정기간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 으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DC업계에서는 정통부의 'IDC 보호지 침' 중 '최상등급'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IDC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업체들의 등급을 매기는 등급제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특허권 침해행위 대폭 강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특허실용신 안제도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허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칙 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 허출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 을 수 없도록 했다.

## 최저낙찰제 보완

현행 낙찰률에 관계없이 낙찰금액의 40%로 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이 낙찰률에 따라 4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천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

전심사(PQ)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낙찰제가 덤핑입찰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한 개선안을 마련, 회계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률을 상향조정, 보증기능을 강화하여 저가입찰이 방지되도록 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모든 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예정가격의 73%에서 75%로 설정한 보증거부기준을 폐지하고 공사의 특성이나 낙찰률, 업체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심사와 담보강화등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PQ공중비중이 낮은 공사는 현행 90점인 PQ통과 점수를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여

PQ 공중비중이 낮을수록 참여업체가 많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PQ 취득점수의 10% 가산에 추가하여 특별한 경우 5%를 더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가산제를 폐지하며 시공경험 평가항목중 동일공사 실적 평가시 300% 이상인 경우 현행 11.4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하여 등급간 격차를 확대했다.

이 개선안은 70%미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PQ심사기준중 신인도 부문에서 1년동안 최고 3점을 감점하며 계약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10%로 축소하여 덤핑입찰이 방지되도록 했다.

**거안제미(學案齊眉)** : 學 들 거, 案 소반 안, 齊 가지런할 재, 眉 눈썹 미

⇒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공경하다